

피지컬 AI 전문가와 전북특별법 특례 발굴 논의

도, 피지컬AI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실증·안전·데이터 규제 애로사항 집중 청취·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전북대학교에서 '피지컬 AI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전북특별법을 통한 특례 도입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특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대학교 김순태 교수, 조형기 교수, 전북연구원

인수영 연구원, 캣릭 송기정 부부장 등 피지컬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피지컬 AI 실증·테스트베드 운영 시 과도한 규제 △협동로봇·자율주행로봇(AMR) 등 신기술에 대한 산업안전 기준의 경직성 △AI 학습을 위한 산업 데이터·영상 활용 제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불명확성 등 현장 중심의 규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실증 단계임에도 정식 인증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가 기술 상용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일정 구역에 한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실증구역 특례'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공정·설비·센서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AI 고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과,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전북 차원의 사고 조사 체계 및 책임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논의됐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을 토대로 △규제자유 실증지역 지정 △실증 특례 패키지 도입 △산업용 데이터 활용 특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 협의 및 후속 입법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장은 "피지컬 AI는 제조·물류·로봇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전북자치도가 규제를 먼저 풀고 실증과 사업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평생교육이용권 전국 최다 사용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성공적 마무리... 사용률 98.2%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운영 결과 총 사업비 11억1,000만원 중 약 10억9,000만원이 실제 학습 참여로 이어져 약 98.2%의 이용권 사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북 도민의 높은 평생학습 수요와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입증한 성과이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에는 일반 디지털, 노인 분야로 세분화해 총 3차(우수이용자

포함)에 걸쳐 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8,000여명의 신청자 중 3,969명을 최종 선정하여 1인당 35만원 상당의 이용권 포인트를 지원했다.

선정된 이용자는 도내 평생교육이 용권 사용기관에서 외국어, 자격증, 취미·교양 등 개인의 학습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수강하며 배움의 기회를 누렸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이용권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 △주거적인 사용 안내 △미사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사용기관 연계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높은 사용률 달성을 이뤘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청년정책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도·시군·유관기관·청년협의체 모여 협업네트워크 구축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공유·현장 실행력 강화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협업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난달 3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도·시군·유관기관·청년협의체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6년 달라지는 청년정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전북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주요 청년지원사업을 공유하고, 청년협의체와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청년정책위원, 청년협의체, 청년허브센터, 인구청년센터,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전문가 특강, 토크콘서트,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에 나선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라 권기호 대표는 "새로운 정책보다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지원을 넘어 대학,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청년정책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현장 사례와 정책 실행 방안이 공유됐으며,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인과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도는 앞으로 지역 청년, 유관기관,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청년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청년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해, 청년이 기획하고 연결되며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시군·유관기관·청년협의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4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린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2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추가적인 재정 집행을 둘러싼 시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남원시의회는 그동안 2심 패소 이후에도 상고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그럼에도 소송이 계속 유지된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해 왔다.

특히 소송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의사결정과 장기간에 걸쳐 소송을 유지한 판단의 합리성에 대해 철저

한 검토가 필요하고 밝히며, 아울러 그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해당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 부담과 추가 재정 집합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 경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분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남원시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소송 패소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 손실과 행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인식과 내부 점검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업과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의장은 "시의회는 추경안을 면밀히 심사해, 불필요한 지연이자와 추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재정·정책을 결정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설명회 열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14개 시군 및 읍·면·동 업무담당 공무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27개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1개 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7개 서비스) 등 주요 사업의 운영 방향과 지침 개정사항, 이용자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서비스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물가상승률과 바우처 사업 분석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시간과 가격을 조정하는 2026년 전북형 사회서비스 개편 사항을 안내했으며, 도 자체 개발사업인 '농어촌 자연경관 및 농장체험 활용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기존 만 18세~30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공유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신체건강관리, 미디어교육, 주거관리, 학습지원, 보조기기 렌탈 등 총 27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서비스별 월 12만 원에서 24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

층층 가운데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조손·한부모 가정, 장기입원 후 퇴원자 등 일상생활에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체수발, 건강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45만 6천 원에서 76만 원까지 지원되며, 1년 단위 재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고립·은 등으로 일상 회복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재가 관리·돌봄 서비스에 대해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중장년 건강 증진 등 7개 특화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입주 기업과 간담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지난 달 30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입주를 앞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허브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식품 수출 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글로벌 식품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

산식품 가공·유통·수출 기능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신단 내에서 육상양식 등 수산식품 1·2·3차 융복합 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메가 샌드박스 적용과 규제 해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어민-기업-지자체-중앙정부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글로벌 식품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

임실군 공고 제2026-1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임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94번지 일원(이하 '구역') 제15호 및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의제되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안) 표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명	변경	변경후	비고
인원	06	이도리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실읍 이도리 194번지 일원	-	15,540	0	15,540	합계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표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표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기명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수	15,540	-	-	15,54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31	-	-	15,031	96.7	
자연녹지지역	509	-	-	509	3.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표시
○ 교통시설(도로) 설정(안) 표시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비고
기명	도로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비고
기명	도로	1	13	8-10	1,943	임실읍-성리리(임실읍-이도리) 도로	04호-중-10(20-1)호-1-4	기명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도로	1	13	8-10	1,939	임실읍-성리리(임실읍-이도리) 도로	(1307)호-중-10(20-1)호-1-4	기명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명	도로	3	23	8	214	임실읍-이도리(임실읍-이도리) 도로	100-3호-중-10(20-1)호-1-1	기명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도로	3	5	10	214	임실읍-이도리(임실읍-이도리) 도로	100-3호-중-10(20-1)호-1-1	기명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본 시/군/자치구의 구도형 등) 설정(안) 표시

○ 기타 수역(수계) 표시(수계) 표시

3) 가구 및 취지의 유무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표시

도면 번호	지구 단위로	면적(㎡)	위치	면적(㎡)	비고
-	A	13,152.1	1	임실읍 이도리 194번지 일원	13,152.1
-	B	115.0	1	임실읍 이도리 199-4번지 일원	115.0

2. 관련도면: 세계성략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6. 1. 27. ~ 2026. 2. 11.(15일만)
나. 열람장소: 임실군청 1층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및 방법: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 기재 후 서면 제출
나. 제출장소: 임실군청 1층(임실읍 임실읍 115-1)호(303호)
5. 기타사항
가.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리드리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청 1층(063-640-2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7일 임실군수